

① 치협·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무료틀니 캠페인 조인식



치협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성수 이하 모금회)가 지난 10월 17일 모금회 사무실에서 협약을 맺고 전국 저소득층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무료틀니캠페인'을 공동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 공동 사업이 차이가 없거나 부실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틀니를 시술해줘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치협과 모금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전국 65세이상 노인 738명(1차 : 369명, 10~개월 선정, 2차 : 369명, 12월~내년 1월 추가선정)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해 틀니를 시술하게 되며, 이를 위한 예산은 삼성에서 내놓은 이웃돕기 성금 중 4억4천2백여만원을 모금회가 확보해 사용한다.

모금회 중앙회에서는 사업예산을 전국 각 모금회 지회에 배분하고, 각 모금회 지회에서는 노인틀니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신청문의 02-360-5994).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치협 신훈식 사무총장, 모금회 윤수경 사무총장, 기부자 대표로 삼성미래전략위원회 민경춘 상무가 참석했다.

① 호남 의료분쟁 세미나 성황 의료사고 실례 등 예방법 소개

치협이 주최한 호남권 치과의료분쟁 예방대책 세미나가 10월 27일 오후 광주무등파크 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임형순 법제담당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크든 작든 의료사고는 치과 의사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치협에서는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회원들간에 정보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임 부회장이 상해진단서를 포함한 의료문서 발급사항을, 고명연 부산치대 교수가 치과의료사고의 실제에 대해 강연하고, 현기용 치협보험이사가 치과건강보험의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임 부회장은 "의료분쟁은 발생하고 나서 사고화되는 것이 통상 몇 달후의 일이라서 유력한 증거인 의료문서에 대한 작성과 보관이 특히 중요하다"며 "진단서를 발부할 때는 반드시 초진 진료후 진단서를 발부할 것"을 강조했다.

고 교수도 치과의료사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례를 들어가며 분쟁에 대한 피해를 설명하면서 미국의 재판전에 반드시 중재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조정전치주의와 일본의 의사배상보험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노경환 광주지부 회장과 문영태 광주지부 의장, 김남수 광주지부 수석부회장 등 회원 280여명이 참석해 호남권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① 서울치대병원 설치법(안) 나왔다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국회교육위원회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로 추진중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설치법안이 공개됐다. 이번엔 공개된 치과병원설치법안은 서울대 치과병원을 법인으로 하고(안 제2조 및 제3조) 치과병원 정관 기재사항을 마련했으며, 정관을 변경할 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안 제4조)

치과병원 사업으로 치대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 수련, 의료요원의 훈련 등을 규정하고(안 제6조) 치과병원 법인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 이사 7인과 감사 1인을 두게 했다.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맡고 이사는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차관, 치과병원장, 서울대 의과대학장과 치과대학장으로 규정했다.(안 제7조)

또 치과병원의 기본설비 확충을 위해 정부가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의학학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가 보조토록 했다.(안 제4조)

법안의 제안이유로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은 치과대학은 의과와 다른 독립적인 교육과정이며 사립대학 부속치과병원들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서울대 치과대학병원을 비롯, 국립대학 치과병원들은 충분한 검토나 의견 수렴 없이 의과대학에 물리적으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현재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은 공동 발의 의원을 많이 확보 할수록 법 통과가 유리하다고 보고 교육위원회 의원 등을 중심으로 서명작업을 진행중이며, 11월 3일 이전에 발의할 예정이다.